

유도 기술 '과실치사 인정'... 징역 2년

폭행에 조르기로 제압...5일뒤 사망 검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기소 "정당방위 해당한다"며 무죄 주장 법원 "정당방위 아니지만 감경 요소"

유도 숙련자인 남성이 60대 피해자에게 '조르기' 기술을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범행이 과잉정당방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해 11월 일용근로자 숙소에서 자신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뒤 칼을 찌른 B씨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찌른 채 헤어스프레이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목을 감아 바다에 넣어뜨린 뒤 약 10분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유도 숙련자였는데, B씨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5일 뒤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3월 8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향한

폭행이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폭행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과잉정당방위 또는 과잉긴급피난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과잉방위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번 A씨에게 일방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단 제압한 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세를 유지했을 뿐 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고, 조르기 기술은 위협한 행위기는 하지만 경도만을 상당 시간 압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행위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자해까지 했으므로 다시 깨어나 반항을 하고 공격할까봐 자세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력사무소 동료 진술까지 보태보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서선욱기자



독도에서 찢기는 옥일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 수호 프로젝트 일환으로 옥일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부하 직원 상습 폭언' 광주 소방관 징계위 회부

폭언·부당하게 업무 배제 소방관 2명에 대해

광주의 한 일선 소방서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한 소방관 2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모 소방서 소속 소방장 A씨와 팀장급 소방위 B씨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몇 인데 생각이 있냐' 등 비하성 발언을 일삼아 부

하 직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고의 배제하거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결국 퇴직했다. 소방본부는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한 달 간 조사를 벌여 A씨 등 2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

또 해당 소방서가 지난해 처음 문

제가 불거졌을 당시 자체적으로 내린 인사 이동 조치가 적절한 지도 들여다본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1년 전 일어난 일이라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서로 '직장 내 괴롭힘'과 '정당한 근무 지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직장 문화 정립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여자만 양식장 실종 선원 2명 숨진 채 발견

선장·선원, 실종 8일만에

여수시 여자만 해상 양식장 관리선에서 지난 10월 22일 실종된 승선원 2명이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여자만 해상 양식장 관리선에서 추락한 승선원 2명이 수색 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월 29일 오후 7시 44분께 고흥군 과역면 목섬 바위 위에 시신이 걸쳐 있는 상태라며 마을 주민이 112를 경유해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를 출동시켰으나 저수심으로 접근이 어려워

민간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은 시신 수습 후 지문 등으로 신원 확인 결과 22일 여자만 해상 양식장 관리선에서 작업 중 추락한 선장 정 모(48) 씨로 확인됐다.

앞서 10월 29일 오전 11시 15분께 고흥군 점암면 여호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기구 선장이 선원 김 모(36)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선장의 시신은 사고정소로부터 약 6.6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작업 도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 2명이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

다. 10월 22일 오후 3시 21분께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남서방 3km 해상에서 순천선적 9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선원 김 모 씨가 작업 중 사람이 해상으로 떨어졌다가 112를 경유해 신고했다.

해경은 신고자인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치추적 된 곳으로 경비함정과 구조대, 항공기를 보내 양식장 관리선을 찾았으나, 김 씨도 실종된 상태였다.

여수 해경은 양식장 관리선이 해상에 표류하고 있었고, 양망 장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선원들이 해상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 해역을 수색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중국산→보건마스크 둔갑 판매한 30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넷 모 사이트에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용 마스크를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같은 달 26일까지 총 1억784만720원 상당의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9만1391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전문가도 추천하는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 3중 필터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라는 과장 광고를 통해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5479장(646만 58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일반용 마스크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료·치료 또는 수술 때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술용 마스크, 환자·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판매된 마스크 수량이 비취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한 마스크가 소비자에게 유해하거나 부작용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 3가지 중 2가지 부분인 안면부 흡기저항, 순도(유해성)에서는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며 분진포집 효율(황사·미세먼지 등 차단율)에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슬비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정 전남 해안, 이제 드론으로 지키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준근, 이하 진흥원)에서는 10월 25일 순천만 화포해변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해양, 하천 모니터링 현장 실증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광주남부소방, 119구조대원 산악인명구조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가을철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본격산 일대에서 산악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무안경찰, 무안군청 박성기 주무관, 경찰의 날 맞아 표창

무안군은 환경과 소속 박성기 주무관(시 6급)이 작년 수해로 실종된 7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공로로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경찰, '어린이보호구역'사고예방 기관합동 특별점검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관련, 경찰·지자체·함평초·녹색어머니회·학부모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함평=김광훈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 수생태계 보전 활동 강화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공원 내 가을철 불법행위 취약지역 집중 순찰을 통해 화순과 담양지역 경계에 위치한 무등계(저수지) 일원에서 통발 28개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스마트관제 시스템 개선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현장 판단 능력과 긴급 상황 대응 세력을 위해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 사용 권한을 확대한 경비구조과 아우정 순경을 지난 9월 '최고 완도해양경찰사'로 선정했다.

완도=이민혁기자